

누구를, 무엇을 위한 알 권리인가



글.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

“우리 그동안 독자들에게만 신경을 써왔던 것 같아. 아웃풋(Output, 산출물)이 아닌 소스(source, 출처)에 관해선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닌지...”

얼마 전 한 선배 기자가 세월호 침몰 관련 뉴스를 보다 문득 물을 하나를 던졌다. 나에게 던진 질문이라기보다는 독백에 가까웠다.

그에게 왜 그런 의문이 스쳤을까. 아웃풋과 소스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내가 그의 말에 동의하면서도 흔쾌하게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다. 그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되짚어 보려고 한다.

세월호 얘기부터 꺼낼 수밖에 없다. 세월호는 한국 사회, 한국 정치 뿐 아니라 한국 언론의 민낯까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학생) 전원 구조’(4월 16일) 사고 당일 뉴스 속보만 믿었던 부모들은 아이들이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잠수 512명, 헬기 29대, 함정 171척’(4월 17일) 부모들은 잠수요원이 10

여 명에 불과했던 당시, 구조 상황을 한껏 부풀린 보도에 “언론이 정부 입장만 받아쓰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내가 팽목항에서 만난 젊은 기자들은 “취재를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기자 수첩을 꺼내면 “당장 나가라”는 가족들의 고성어 터져 나왔다. 카메라를 향해 물병이 날아오기도 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외신 기자들이 실종 학생 부모들을 인터뷰할 때 그 뒤쪽에 국내 기자들이 옹기종기 서서 수첩에 대화 내용을 적고 있는 장면이었다. 얼마나 언론을 불신했으면... 가슴이 답답해졌다.

단원고 고3 학생이 쓴 ‘대한민국의 직업병 걸린 기자분들께’에서도 언론에 대한 분노는 확인됐다. 기자가 장래희망이었다는 그는 자신이 꿈을 접은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양심과 신념을 뒤로 한 채 가만있어도 죽을 만큼 힘든 유가족들과 실종자 가족분들, 애타게 기다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큰 실

망과 분노를 안겨줬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아니 기자들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인가. 과연 몇몇 기자, 몇몇 언론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 이런 불신이 계속된다면 기자들의 내일은 없는 것 아닌가.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 있던 진도 실내체육관과 팽목항이 한국 사회를 압축한 것이라면 기자들이 설 곳은 과연 어디인가. 내가 기자라는 직업인으로서 갖게 된 위기감은 그러한 것들이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가장 큰 원인은 기자들 스스로에게 있었다. 한마디로 소스, 즉 기사를 작성하는 공정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다. 기사야 어떻게 만들어지든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자세였다. 특종을 하는 것이, 좋은 기사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모든 것은 ‘국민의 알 권리’라는 만능키로 해결됐다. 국민이 그 기사를 왜 알아야 하는지, 그 기사가 어떻게 생산됐는지에 관한 고민은 생략됐다.

그 결과 취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소외되고 말았다. 기자들이 세월호 희생자·실종자 가족들의 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질문을 던지거나 촬영을 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가족들의 비통함조차 ‘기삿거리’였을 뿐이다. 물론 그 슬픔을 온 국민이 공유하도록 한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대로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할 것은 당사자인 가족들의 마음이었다.

세월호 참사 후 한국기자협회에서 발표한 ‘세월호 참사 보도 가이드라인’을 보자. “세월호 참사 보도는 신속함에 앞서 무엇보다 정확해야 한

다. 주요 현장에서 취재와 인터뷰는 신중해야 하며,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해 보도한다. 언론은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국민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노력한다...” 어쩌면 당연한 원칙인데도 기자들은 망각했거나 무시했다.

소스의 위기는 실종자 가족 보도에 그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방송사를 중심으로 보도의 독립성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따라 기사를 생산하고 내보내는 과정에 어떠한 이물질이 끼어드는지 국민들은 주목했다. 기사가 순수한 취재의 결과물이 아니라 언론사 외부의 입김이나 언론사 자신의 이윤 논리, 정치적 편향 등에 의해 왜곡될 수 있음을 국민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한 것이다.

“언론사도 돈을 벌어야 하는 기업이다”,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불가피한 측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줄여나가려는 노력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건 용서받기 힘들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지만, 입이 삐뚤어지면 삐뚤어진 말 밖에 나오지 않는다. 나아가 상당수 국민들은 기자들이 지금까지 믿고 기대온 기존 소스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길을 던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 초기에 제기된 오보 논란은 ‘정부 발표는 그냥 믿고 써도 된다’는 기자들의 믿음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정부 발표도 따져보고 확인해봐야 한다. 정부 발표대로 썼다고 해서 기사 작성·보도

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피동형 기사도 소스의 문제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인 것으로 판단된다’ ‘~로 풀이된다’ ‘~로 관측된다’ ‘~라고 전해졌다’ 같은 피동형 표현은 무분별한 익명 사용과 함께 객관 보도의 의무를 저버리는 통로가 되기 일쑤다. 김지영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위원이 쓴 책 〈피동형 기사들〉은 이렇게 지적한다.

“피동문 기사에서는 글을 쓴 행동주체인 기자가 잠적한다. 자연히 글의 책임성이 부족해지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한국 언론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선 소스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내가 “소스가 문제”라는 선배 기자의 말에 완전히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웃풋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소스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기사는 아웃풋에 그 흠결이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소스를 지나치게 믿는 데 따른 오보도 그러하지만 이른바 ‘야마주의’의 폐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야마주의’란 특정 언론사의 취향에 맞는 주제에 따라 팩트를 변형시키는 것을 말한다. 언론 자신이 야마주의에 빠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다행이다. 자신이 야마주의에 포획돼 있음을 알지 못할 경우 더 큰 폐해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1월 인권보도준칙 준수 실태와 관련된 토론회에 참석했을 때다. 윤여진 언론인권센

터 사무처장이 나주 성폭행 사건을 예로 들면서 “언론은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 기자들이 자기 기사로 당사자에게 얼마나 피해를 줄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사무처장은 자신의 말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했다.

“기사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오히려 당당하게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대체 자신이 뭘 잘못했느냐는 거죠. 기자들, 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순간 옆자리에 앉아 있던 내 얼굴은 붉어졌다. 알 권리를 내세워 갑(甲) 행세를 하던 기자들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나 역시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갑질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20여 년 전의 일이 떠오른다. 당시 나는 기자 직업에 대한 깊은 회의에 빠진 적이 있었다. 취업 준비를 하던 졸업생이 술을 마신 뒤 건물에서 떨어져 숨졌다. 당시 경찰 출입 기자였던 나는 경찰에서 만든 자료와 경찰관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다. 취업 실패를 비판해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었다. 이 기사에 대해 가족들은 “취업 실패를 비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반발했다. 사실 그가 유서를 쓴 것도 아니어서 정확한 원인은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당시 사회 문제로 떠올랐던 취업난에 맞춰 기사를 썼던 것이다. 그래야 기사가 먹히니까. 내

적인 고민에 시달렸지만 결국 가족들을 찾아가 사과하지도, 기사를 바로잡지도 못했다. 선배·동료 기자들은 “오보로 확인된 기사는 아니지 않느냐”고 위로했다. 나는 그들에게 “기자 그만두고 싶다”고 우는소리를 하다가 다시 익숙한 생활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양심을 가진 기자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한편으론 세상에 대해선 갑질을 해온 것이 어찌면 나의 실제였는지 모른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취재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보도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취재원에 대한 진지함 없이는 국민의 알 권리, 독자의 알 권리도 보장할 수 없다. 심하게 말하면 ‘알 권리’가 아니라 ‘기자의 보도를 알 권리’ ‘잘못 알 권리’로 전락하게 된다. 국민을 위하고 독자를 위한다면서 정작 기자 자신의 인일함, 언론사의 영향력만 위하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

세월호 보도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 언론에 대

한 ‘옐로우카드’다. 이제까지 중력과 같은 관성에 젖어 살던 기자들에게 ‘계속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U턴 표지판이다. 만일 기자들이 세월호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이른바 제도권 언론들은 쇠락의 길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지금이라도 무엇이 진정한 알 권리이고, 어떤 것이 진정한 언론의 사명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오늘도 많은 기자들이 현장에서 팩트를 찾고 확인하기 위해 발로 뛰어다니고, 굵은 땀을 흘리고, 긴 밤을 지키고 있다. 나는 그들의 발과 땀과 밤이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선 매 순간 인간의 가슴을 잃지 않으려는 분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한국 언론의 시스템을 진화시켜야 한다. 바로 그것이 세월호 객실에서 ‘기다리라’는 말에 간혀 숨져간 아이들을 추모하는 방식일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